

토 의

## 1. 세계의 환경문제

### 박 계 숙

연세대학교 학교건강관리소장

### 요 약

1992년 6월, 브라질의 Rio de Janeiro에서는 세계인의 관심속에 '환경과 개발을 위한 국제연합 환경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세계 1백 78개국에서는 1만 5천여명 이상의 대표들과 1백 15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직접 참여한, 당시까지 열렸던 최대규모의 국제 환경회의였다. 리우회의가 이처럼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은, 점차 인류의 생존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환경오염과 80년대 이래로 계속되어온 후진국들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한 그 어떤 해결책이 나오리라는 막연한 기대감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 회의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는 지난 1972년 Stockholm에서 열린 "Earth Summit" 유엔환경회의(그때는 2개국 수상만이 참석했음) 이후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이라는 두개의 모순적인 패러다임(Paradigm)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가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

### I.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

선진국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후진국에게도 그들의 환경정책에 상응하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후진국들은 나라별로 이견이 있긴 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환경오염은 선진공업국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도 이들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후진국들의 공업화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된다.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빠른 경제성장은 자연을 해손 시킬 수 있으나 이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들이 후진국들에도 적용될 경우,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경제적인 원조를 해야 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은 선진국에서 무료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후진국에 전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후진국들의 주장을 선진국에서도 무조건 거부만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발전 초기단계에 전세계를 식민화하면서 식민지의 자원을 무차별 수탈한 과정은 제쳐 놓고라도, 5·60년대 선진국의 발전론자들은 그들의 공업화 모델만이 후진국의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발전전략이

라 주장하면서 경제발전을 강요한 바 있고, 60년대에 들어서는 그들의 공해유발 산업들을 후진국으로 이전시켜 공해문제를 일부 해결했기 때문이다.

독일 환경운동은 녹색당이 의회로 진출함에 따라 질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환경문제는 사회운동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각 정당들이 중요시하는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의회에 진출한 녹색당은 환경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코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을 건립하였다. 이 시기에는 이미 새로운 사회운동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음에도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이는 대중매체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이 강조되면서, 녹색당에 이어 제일 야당인 사민당도 핵에너지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환경운동은 단수한 저항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를, 갈등보다는 대화와 일정 수준의 공조체제의 확립을, 환경과 경제의 대립구조에서 환경관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환경의식과 환경보호운동은 이제 사회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게 돼 환경친화적인 가치관이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90년대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독일의 통일 이후 시기로, 흡수통일의 후유증으로 독일 경제가 급격하게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환경보호보다는 경제의 활성화가 중시되고 있다. 구동독지역에서는 구서독의 환경기준이 무시되고 있다. 반면, 환경문제는 이제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윤리관이나 가치관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과다한 환경세를 통해 개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사회적 인 부를 스스로 제한시키거나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는 사회구조와 문화체계를 그대로 둔 채,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소비자의 의식과 생활양식을 자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는 환경 위기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환경파리주의적 관점에서 진행된 1972년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 이후 지구의 자원은 엄청나게 고갈되었고, 세계의 산림은 사라져 갔고, 사막은 늘어나고 있으며, 인구는 폭발하고 있고, 남극의 오존층 구멍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여름의 그 고통스런 더위도 지구 온난화라는 무서운 기상변화의 서곡일 뿐이다.

## II. 환경운동의 방향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환경운동의 세 대상-시민, 기업, 정부-에 따라 우리 환경운동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로 시민에 대한 환경운동은 시민들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쓰레기 재활용운동,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러한 운동은 시민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함으로써 환경의식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중요한 한계를 갖고 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은 한편으로는 합성세제를 덜 쓰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광고를 통해 이익을 올리고 있다. 풍요와 편리함, 그리고 빠른 일처리가 중시되는 사회체계속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환경친화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둘째로 환경운동은 기업에 대한 압력을 통해서 사

회체계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 환경운동 단체들은 개별 기업의 오염을 감시하거나 불매운동을 조직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불매운동은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기업에 대해 자연과 시민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적극적 의미의 녹색소비자운동은 자본주의의 시장논리를 통제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세째로 환경운동에서 국가에 대한 정치적 압력운동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국민국가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게 시민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환경운동은 국가가 자본축적의 담지자가 아니라 일반이익의 담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을 조작해야 한다. 환경운동 조직은 정부의 예산이나 정책 입안과정에서부터 시민중심, 환경중심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제기획원이 환경처가 제출한 환경예산을 얼마나 삭감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국민에게 알리고 그것을 쟁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III. 환경문제의 원인

오염물질이 자연의 정화능력을 초과한테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 이후의 산업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특히

- ① 선진국으로부터 사양화된 공해산업의 무분별한 유치
- ② 울산, 온산, 여천, 등 특정지역 공단 중심의 산업화
- ③ 도시화로 인한 오염 집중 등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환경문제는 그 근본 원인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차원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학적 개혁없이 제도나 경제체계 변화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근본적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비오디(BOD)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면, 에스오디(SOD)는 사회적 산소요구량을 말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에스오디가 매우 높은 상태이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가 심각하게 오염됐으며, 환경문제의 근본원인은 우리 사회가 에스오디가 매우 높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스오디를 낮춰야 한다.

#### IV. 종합운동으로서 환경운동

환경운동은 다른 여러가지 운동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운동은 먼저 생명운동이고

- ①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되찾으려는 문화회복운동이며
- ② 우리나라가 공해 식민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독립운동도 될 수 있다.
- ③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한 민주화운동
- ④ 경제성의 실현운동
- ⑤ 여성해방 운동

- ⑥ 인간성 회복을 위한 운동 등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환경운동단체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영어단어 민(MEAN)을 사용해서 얘기 할 수 있는데, 이는 감시 (Monitoring) 교육 (Education) 대안 제시 (Alternative) 연대 (Network)를 말한다.

감시는 환경의 질, 즉 환경이 처한 상태에 대한 감시와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감시로 나눌 수 있다. 대안제시는 환경전문단체들의 녹색대안 제시를 말한다. 연대는 환경단체들 간의 수평적 연대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단체들과의 연대, 나아가 국가적인 연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생태계가 생산-소비-분해의 과정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듯이, 경제체제도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다행생산이 대량소비로는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 즉, 분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활용이나 재생산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생태계가 지니고 있는 순환의 법칙, 종 다양의 법칙, 에너지 최소 소비의 법칙 등을 경제체제에도 똑같이 적용하게 된다.

2차대전 후 약 40년간 지속되던 미소 경쟁체제의 의해로 냉전이 해소되면서 전선지구적인 이슈가 핵문제에서 환경문제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환경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선진국에 있고, 그런 라운드는 분명히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지금 상황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다고 본다. 오히려 엔지오 (NGO, Non-Governmental-Organization, 민간부문)가 환경운동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각 나라의 환경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3세계 국가로부터 환경제국주의 국가라는 비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나무 수입국이라는 점과 일본에서 들어와 큰 문제를 일으켰던 원진레이온 기계를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려 한다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 V. 핵과 대안에너지

인류가 생산한 가장 큰 참사를 꼽는다면, 체르노빌 사고와 보팔 까스누출 사고를 들 수 있다. 두 사건이 AP 통신이 선정한 80년대 10대 사건에 들었고, 아직 까지도 그 피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전혀 의미있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생태계는 물론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사건에도 무감각한 것을 보면서 환경철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에너지 문제의 해결은 절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20세기가 소비의 시대라면, 21세기는 절제의 시대이다. 가능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저공해 에너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안 에너지 정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 산업구조 조정이라고 본다. 현재의 산업구조는 소비형 산업구조인데 이를 순환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증대와 모든 국민의 절제적인 생활만이 대책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환경운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삶의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 지금의 학생들은 너무 대량 소비체제에 젖어 살고 있다. “환경위협의 주범이 바로 나”라는 전제하에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와 산업주의 사회구조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들이 ‘성장의 (자연적)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금욕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앞으로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즉 환경을 해치지 않는 경제발전을 해야 한다.